

해외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와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빈 재 익
연구위원 이 홍 일
연구위원 박 성 민

■ 서 론	4
■ 해외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7
■ 한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	22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0

요 약

- ▶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 해외국가들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의 소득 증가와 이를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향하는 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 경기활성화대책에는 복지에산 증가를 통한 가계의 소득 보전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일자리 공급을 지향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다시 도로, 교량 등 건설투자가 주내용을 형성하는 전통적 사회간접투자와 녹색경제기반 형성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사회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음.
- ▶ 각국의 경기활성화대책은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 하에서 각국이 처한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구체화되고 있음.
- ▶ 경기활성화대책에는 복지에산 증가를 통한 가계의 소득 보전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일자리 공급을 지향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 미국과 EU 회원국의 경우는 공공의료, 서민층 보호 등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는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을 증액하였는데, 사회간접자본투자는 향후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는 녹색경제기반 형성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함.
- ▶ 일본은 과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의 전통적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실패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기반형성 관련 투자, 사회복지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왔으나 국회에서 확실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복지제도 확충을 부가한 경기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 우리나라 경기활성화대책의 특징은 규모가 작고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임.
- ▶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유용하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실제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는 미래전략산업의 기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거나 혹은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로 인해 촉발된 금융 위기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하고 있음.
- 미국 경제는 2008년 4분기 이후, EU와 일본 경제는 2008년 3분기 이후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 접어들었음.
- 미국의 GDP는 전분기 대비 2008년 3분기에 0.1% 감소한데 이어 4분기에도 1.6% 감소함.
- EU(27개 회원국) GDP는 2008년 2분기 0.1% 감소, 3분기 0.3% 감소에 이어 4분기에는 1.5% 감소함.
- 일본의 경기침체가 가장 심각한데, 2008년 2분기 1.2% 감소, 3분기 0.4% 감소에 이어 4분기에는 3.2% 감소함.

< EU, 미국, 일본 실질 GDP 전기 대비 증가율 추이 >

(단위 : %)

구분	IV-06	I-07	II-07	III-07	IV-07	I-08	II-08	III-08	IV-08
미국	0.4	0.0	1.2	1.2	-0.0	0.2	0.7	-0.1	-1.6
EU(27국)	0.9	0.7	0.6	0.7	0.6	0.5	-0.1	-0.3	-1.5
Euro Area	0.9	0.7	0.4	0.6	0.4	0.7	-0.3	-0.2	-1.5
독일	1.1	0.4	0.4	0.6	0.3	1.5	-0.5	-0.5	-2.1
영국	0.9	0.8	0.9	0.8	0.6	0.4	-0.0	-0.7	-1.5
프랑스	0.6	0.5	0.6	0.7	0.4	0.4	-0.3	0.1	-1.2
스페인	0.9	1.0	1.0	0.6	0.6	0.4	0.1	-0.3	-1.0
일본	0.8	1.0	-0.3	0.4	1.0	0.3	-1.2	-0.4	-3.2

자료 : eurostat

- 미국의 경기침체가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시작되었음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의 생산 감소가 산업전반의 생산감소로 이어지는 양상을 미국과 EU 주요 국가에서 관찰할 수 있음.
- 경기부양을 위해 미국과 EU의 주요 회원국이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건설투자를 실시함에 따라 건설산업 생산지수의 감소 정도는 산업전반 생산지수 감소에 비해 적음.

<미국과 EU지역 산업전반¹⁾ 및 건설산업²⁾ 생산지수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 추이>

(단위 : %)

구분		07.03	07.06	07.09	07.12	08.03	08.06	08.09	08.12
미국	산업전반	-0.3	0.6	0.3	0.1	-0.2	-	-4.1	-2.4
	건설산업	1.0	1.1	-0.4	-0.3	0.1	0.7	-2.5	-3.9
EU (27국)	산업전반	4.1	3.1	3.4	3.6	2.3	-0.2	-3.1	-10.6
	건설산업	4.3	3.2	3.7	1.8	0.1	-0.7	-3.2	-5.7
Euro Area	산업전반	4.4	3.1	3.9	3.6	1.7	-0.5	-3.6	-11.1
	건설산업	6.3	2.1	2.8	0.6	-3.6	-2.6	-4.4	-8.0
독일	산업전반	8.1	6.1	6.5	5.4	4.3	2.2	-1.8	-12.6
	건설산업	25.3	-1.5	-1.7	-3.4	-4.0	0.1	-2.1	-2.8
영국	산업전반	-0.4	0.8	-0.3	2.2	1.5	-0.8	-1.7	-9.2
	건설산업	1.2	12.3	9.7	-5.3	2.4	7.5	-1.3	5.0
프랑스	산업전반	0.9	-0.1	1.9	1.8	0.2	-1.9	-2.3	-11.1
	건설산업	-4.5	-6.4	3.0	-1.7	-1.5	-2.3	-3.0	-3.9
스페인	산업전반	3.6	1.8	1.1	0.6	-2.9	-7.4	-9.8	-17.8
	건설산업	10.8	1.6	0.4	-3.4	-11.8	-12.5	-17.4	-21.1

자료 : eurostat,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미국, EU 회원국, 일본 등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재정수지, 정부부채 규모 등에 따라 제약을 받음.
-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음.
- EURO화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Stability & Growth Pact에 의해 재정적자는 GDP의 3%, 국가채무는 GDP의 60%라는 제약을 받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일본은 90년대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GDP의 160%가 넘는 정부부채를 가지고 있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쉽지 않음.

1) 미국의 산업생산지수는 Industrial production seasonally adjusted(base year 2002)이고 건설산업을 포함. EU의 산업생산지수는 Production indices for total industry excluding construction seasonally adjusted (base year 2000)

2) 미국의 건설산업 생산지수는 상기 산업생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사용. EU의 건설산업 생산지수는 Production indices for total construction, seasonally adjusted (base year 2000)

< EU지역 정부의 연결 수치 및 부채(GDP 대비 비율) >

(단위 :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미국	재정수지	2.4	1.3	-1.5	-3.5	-3.6	-2.6	-1.9	-1.2
	부채	58.0	57.4	59.7	62.5	64.0	64.6	64.9	65.5
EU (27국)	재정수지	0.6	-1.4	-2.5	-3.1	-2.9	-2.4	-1.4	-0.9
	부채	61.9	61.0	60.3	61.8	62.2	62.7	61.3	58.7
Euro Area	재정수지	0.1	-1.8	-2.5	-3.1	-2.9	-2.5	-1.3	-0.6
	부채	68.7	68.4	68.2	69.3	69.7	70.3	68.6	66.3
독일	재정수지	1.3	-2.8	-3.7	-4.0	-3.8	-3.3	-1.5	-0.2
	부채	59.7	58.8	60.3	63.8	65.6	67.8	67.6	65.1
영국	재정수지	3.6	0.5	-2.0	-3.3	-3.4	-3.4	-2.7	-2.8
	부채	41.0	37.7	37.5	38.7	40.6	42.3	43.4	44.2
프랑스	재정수지	-1.5	-1.5	-3.1	-4.1	-3.6	-2.9	-2.4	-2.7
	부채	57.3	56.9	58.8	62.9	64.9	66.4	63.6	63.9
스페인	재정수지	-1.0	-0.6	-0.5	-0.2	-0.3	1.0	2.0	2.2
	부채	59.3	55.5	52.5	48.7	46.2	43.0	39.6	36.2
일본	재정수지	-3.2	-11.2	-10.6	-11.0	-12.0	-8.6	-7.8	-7.9
	부채	106.8	123.0	136.5	142.4	156.8	164.4	163.3	164.6

자료 : eurosta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Bank of Japan

－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와 금융기관의 부실화 정도는 미국 경제 및 국제자본시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위기의 원인유형을 국가별로 구분할 수 있음.

①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와 금융기관의 부실 동시 발생 : 미국, 영국

②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와 유동성 경색 :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③ 부동산 거품붕괴와 ②의 요인 : 스페인

· 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위기 원인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음.

－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유형과 국내외 경제정치사회 요인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의 안정화대책과 경기활성화대책을 포함하는 경제위기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은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주체들이 유동성에 집착하면서 신용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가계와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금융 흐름을 복구하는 것을 지향함.

- 경기활성화대책은 다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치와 소비자와 기업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투자 진작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도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투자 진작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그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중장기가 필요하고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그 효과의 가시화를 단기에 기대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고조되어 있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가계에 직접 현금을 배분하는 정책이 의도했던 소비 진작보다는 현금 축적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미국, EU지역(특히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중국, 일본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중에서 건설산업과 관련 있는 정책을 서로 비교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함.

II. 해외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

1. 미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1) 경제위기 대처방안

- 미국 연방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은 경기부양(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 :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과 금융 안정화(금융 안정화 계획: Financial Stability Plan)의 두 가지 축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 금융안정화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해 미 재무부가 투자한 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안정화 기금 설치
 - 공적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민간-공공 투자 펀드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
 - 소비자 금융과 중소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한 TALF(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 자산유동화증권대출기구)의 대상 자산 유동화 증권 폭을 확대하고 규모를 증가

·금융안정화 계획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원 금액을 실제로 대출증가에 사용하였는지 보고하여야 하고, 모기지 주택 압류 완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하며, 보통주에 대한 배당 및 자사주 매입과 인수 등을 하지 못하며, 임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도 제한을 받음.

·모기지 주택의 압류를 제한하는 조치

－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은 2009년 2월 13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고 2월 17일 오바마 미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입법과정을 완료함.

·동 법안에 포함된 지출규모는 신규 지출 \$ 4,990억, 세금감면 \$ 2,880억 등 총 \$7,870억에 이룸.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입법화되어, 2010년 9월 30일까지 74%의 금액이 직간접적으로 지출될 예정

<지출항목별 금액 구성>

구분	금액(십억 달러)	비고
세금감면	288	－ 간접적으로 아래의 지출항목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사회간접자본 및 과학’: \$15billions · ‘사회적 약자 보호’에 \$61billions · ‘교육 및 훈련’에 \$25billions · ‘에너지’에 \$22billions
주정부 및 지자체 재정위기 완화	144	－ 주정부 및 지자체의 보건 및 교육 관련 지출 삭감방지 － 세금 인상 방지
사회간접자본 및 과학	111	－ 세금환급에서 발생하는 간접 효과를 감안하면, \$126billions
사회적 약자 보호	81	－ 세금환급에서 발생하는 간접 효과를 감안하면, \$142billions
보건 의료 서비스	59	
교육 훈련	53	－ 세금환급에서 발생하는 간접 효과를 감안하면, \$78billions
에너지	43	－ 세금환급에서 발생하는 간접 효과를 감안하면, \$65billions
기타	8	
합계	787	

자료 : www.recovery.gov

-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은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 프로젝트를 경기부양 프로그램으로 포함하고 있음.
- 고속도로와 교량사업에는 \$29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정부 단위로 분산되어 집행될 예정
- 풍력, 태양광 발전 등 변동이 심한 전력생산을 처리할 수 있고, 대규모 컴퓨터 서버의 운용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농촌지역으로 광대역 인터넷망을 확대할 수 있는, 전기 배전망 근대화 사업에 \$ 110억이 계상되어 있음.
- 모기지론 연체로 발생하는 거주자의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 상실의 대량발생이 지역 사회를 황폐화하는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양질의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에 \$100억이 계상되어 있음.
- 대도시의 대중교통 수단 확충을 위해서 \$8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허드슨 강 아래로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Hudson Rail 터널, 1970년 재정위기로 중단된 뉴욕의 Second Avenue Subway, 수도 Washington DC 지하철을 공항(Dulles Airport)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이 해당 예산의 수혜대상으로 거론
-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지출은 의회 협상 과정에서 급증하여 \$8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고속철도사업과 그 외 미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10개 지역 고속철도사업의 down payment로 지출될 예정

(2)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

-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법이 포함하고 있는 재정지출 규모 \$7,870억은 미국 GDP의 5.5% 수준임.
- ‘사회간접자본’ 항목뿐만 아니라 여타 항목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과 관련된 지출을 모두 합하면, 그 규모는 \$1,500억에 달하고 400,000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어 내거나 보존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배분된 예산은 19%의 비중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가게 및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사회복지예산 확충, 에너지 관련 지출, 과학연구 지원 등에 배분

- 사회간접자본투자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언급했던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사회간접자본 은행(the national infrastructure bank)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프로젝트 선정과 진행에서 효율성 확보가 어려워짐.
- 정부의 부채규모는 높지 않으나, 재정적자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화 규모와 범위가 커, 금융시장의 안정화에도 많은 재정자금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 가능성은 제한됨.
-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일정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경기활성화대책만으로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모드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음.

2. 주요 EU 국가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1) 경제위기 대처방안

- 금융 안정화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은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프로그램, 은행 채무에 대한 보증,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량 자산 매입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함.
- 각국마다 규모 차이가 있는데, 독일(전체 규모 €4,700억, 이중 €4,000억은 보증), 영국(전체 규모 £6,954억, 이 중 £4,500억은 보증), 프랑스(전체 규모 €3,600억, 이 중 €3,200억은 보증), 스페인(전체 규모 €2,500억, 이 중 €2,000억은 보증)임.
- 영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을 국유화하고 있는데, Northern Rock, Bradford & Bingley의 모기지사업 부문의 국유화에 £1,454억, Royal Bank of Scotland(58%)와 Lloyds Banking group(43%, 2009년 1월 HBOS 합병 후 약화된 Loyds의 자본 확충을 위해 65% 상향) 지분 소유를 위해 대규모 자금 지출
-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집행되는 €1,700억과 EU가 집행하는 €300억 등 모두 €2,000억(EU 전체 GDP의 1.5% 수준)의 경기활성화대책을 결의함.

- 독일은 두 번에 걸쳐 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는데, 1차 활성화대책의 규모는 €230억이고 2차 활성화 대책의 규모는 €500억임.
- 기업의 감가상각분에 대한 세금감면, 중소기업과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지향하는 기술혁신에 대한 자금 지원
- 자녀 장려금 €100, 일부 사회보장 연금 급부액 증액, 오래된 차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500 장려금 지급,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공사에 보조금 지급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지출규모는 €180억이며, 도로와 철도망 건설과 보수, 학교와 대학 건물 건축 및 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

- 영국의 경기활성화대책 규모는 £200억임.
- 부가가치세율 인하, 법인세 인상 연기, 중소기업의 세금납부 기일 연장, 별도의 £200억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 대출금의 50% 정부 보증
- 모기지론 시장사정 악화로부터 주택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지출규모는 €31.3억이며, 고속도로 개량, 학교 건물 개축, 공영주택 수리 등에 사용될 예정

- 프랑스 경기활성화대책의 규모는 €320억인데, 이 중 €60억은 자동차산업 지원용임.
- 프랑스는 소비 진작을 위한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급보다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기활성화대책 시행
-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상환금 조기 지급, 건축 및 개축에 대한 보조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용자, 공공조달 사업에서 down-payment 증액 등에 €110억 배정
- 정부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원래 2010년 이후로 계획되었던)에 €65억, 국영 철도회사, 국영전력회사 등의 투자 €40억

- 스페인의 경기활성화대책 규모는 €500억임.
-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지원, 자동차 산업 부양대책, 주택건설 지원제도 연장
- 소득 공제 범위 확대, 재산세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80억), 환경 관련 투자(€8억), 정부의 R&D

투자(€5억), 공공주택, 병영, 장애인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될 예정

(2) 대처방안에 따른 재정건전성 전망

- 독일의 경우, 경기부양대책이 포함하는 예산규모는 GDP의 4.7% 수준이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180억임.
- 재정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경기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재정수지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부양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낮은 이자율, 높은 배당률, 민영화를 통한 자본 이득 등을 감안할 때, 정부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음.
- 영국의 경우, 경기부양대책이 포함하는 예산규모는 GDP의 5.0% 수준이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31.3억임.
- 경기부양대책의 영향으로 2007/8년 5.4% 수준이었던 재정적자 규모가 2009/10년에는 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경기상황이 보다 악화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9.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됨.
-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확대재정정책의 집행으로 2007/8년 41.2%였던 정부의 부채 비율(GDP대비)이 2009/10년에는 4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3/14년 말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EU는 영국정부에게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정부부채 비율을 줄이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받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경기부양대책이 포함하는 예산규모는 GDP의 2.2% 수준이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105억임.
- 2008년 GDP의 3.2%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가 경기부양대책으로 인해 2009년에는 GDP의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유로화의 기초가 되는 Stability&Growth Pact에서 정한 3% 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임.
-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은 67.5%로 예상되어 Stability & Growth Pact에서 정한

60% 범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스페인의 경우, 경기부양대책이 포함하는 예산규모는 GDP의 4.9% 수준이고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80억임.
- 2008년에 GDP의 3.4% 수준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가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인해 2009년에는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스페인 정부의 노력으로 2007년 36.2%까지 줄어든 정부부채 규모도 경기활성화대책의 결과로 2010년에는 50%를 상회할 전망이다.
- 지난 2월 18일, EU 위원회는 각국의 재정정책을 Stability & Growth Pact 조건 준수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평가하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에 대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정부부채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음.

3. 일본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1) 경제위기 대처방안

- 일본은 2008년 8월 이후 3번에 걸쳐 모두 ¥75조의 재정지출을 포함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 이들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대책들 중 얼마나 많은 대책이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음.
- 현재 예산에 반영된 규모는 ¥12조인데 일본 정부는 GDP 2%를 상회하는 규모(¥10조 초과)의 경기활성화대책을 4월 중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얻기 위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일본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은 경기침체 방지와 일자리 및 서민경제 보호를 지향하는 단기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 경제력 제고를 지향하는 장기 산업정책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경기활성화 방안>

경기부양 대책	내용
① 2008년 8월 경기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등 금융시장 활성화 ¥10조 -신규 정부지출 ¥1.7조 ·농업부문 보조금 ·비정규직 노동자 구직활동 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환불 ·의료, 주거, 교육, 환경기술
② 2008년 10월 경기활성화 방안	-신규 정부지출 ¥5조 ·모기지론에 대한 세제상 특전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가계 세금 감면
③ 2008년 12월 경기활성화 방안	-금융시장 안정화 ¥13조 -신규 정부지출 ¥10조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보조 ·대량해고된 노동자의 구직활동 지원과 실직 기간 중 주거비용 지급

- 축적된 정부부채 규모가 GDP의 160%를 초과하였고 경기침체가 진행되면서 재정적자 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일본 정부는 재정지출보다는 보증 등의 방식으로 금융시장 정상화에 치중하였으나, 경기침체 정도가 심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2008년 8월 대책에서는 ¥1.7조였고 10월 대책에서는 ¥5조로 증가하였는데, 미국과 EU 회원국에 비해 경기활성화대책 규모가 작다는 평가가 일본 내외에서 제기되었고, 경기침체도 예상보다 심각해지면서 12월 대책에서는 정부지출의 규모가 ¥10조로 증가하였음.
- 90년대 전통적인 사회간접투자를 대상으로 했던 막대한 재정지출이 의도했던 경기부양 효과없이 정부 재정상태만 악화시킨 경험이 있어 전통적인 사회간접투자 부문의 지출은 적은 규모임.
- 2008년 12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 보조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1조가 전부인데, 이 항목에서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예산은 지방정부의 도로 정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투자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음.

(2)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

- 4월에 정부가 확정할 대책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의 총규모는 GDP의 4.5%에 상응하는, 2008년 12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기활성화대책 규모인 ¥23조와 비슷하거나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전통적인 사회간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활성화대책의 규모가 ¥23조일 경우, 4.3%임.
- 중앙정부는 교부금의 형식으로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지역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구조임.
- 중앙정부는 전통적인 사회간접투자보다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 등의 산업기반 조성같은 미래지향적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

4. 중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1) 경제위기 대처방안

- 중국은 2년간 GDP 규모의 13.3%에 상응하는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내수 부양책을 발표했다.
- 4조 위안 중 인프라 분야에 45%, 재난 복구 분야에 25%, 농촌지역의 인프라 및 복지 분야에 9.3%를 투자할 계획임.

< 10개 항목의 경기부양조치 주요 내용과 투자 규모 >

구분	조치	주요내용	투자규모(위안)
투자관련 조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판자촌 개조, 유목민 주거 안정, 농촌 주택 개조	2,800억 (7.0%)
	농촌기초 시설건설	-가스와 안전한 식수 제공, 농촌 도로 건설, 전선망 완비, 남수북조 등 대형 수리공정 신속 건설, 대형 댐 개조	3,700억 (9.3%)
	주요 기초시설 건설	-철도, 도로와 공항 등 중대 기초시설 신속 건설 -중점 : 고속버스 전용차선, 석탄운송수단과 서부간선철로의 건설, 고속도로망 완비, 중서부간선 공항과 지선공항(4C급 이하)을 건설, 도시 전선망 개조	18,000억 (45.0%)
	생태환경 건설	-도시의 수질오염과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강화 -중점 : 유역수질오염 예방, 방호림과 천연 임자원 보호, 자원 절약과 배수 감소시설	3,500억 (8.8%)
	지진지구 복구 사업	-사천성 대지진 재해 지역 복구(중장기 재정지원 재건 기금 3,000억위안)	10,000억 (25.0%)
	자주창신과 구조조정	-고기술 산업 건설과 산업 기술 진보 지원 -서비스업 발전 지원	1,600억 (4.0%)
	증치세 개혁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산업에서 부가가치세 유형을 전환하여 기업 기술 개조를 장려 -기업의 조세 부담 1,230억 위안 경감 기대	-
	신용대출 완화	-금융의 경제 성장 지지력 강화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 규모 제한 취소, 신용대출 규모의 합리적 확대	-
소비관련 조치	의료, 위생, 문화교육 사업	-기본 의료 위생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 중서부 농촌 중학교 건물 개조, 중서부 지역 특수교육학교와 향진종합문화센터 건설 추진	400억 (1.0%)
	도시농촌 주민 소득 향상	-2009년 식량 최저 구매 가격과 보조금 인상 -저소득자 등 사회보험 대상 대우 수준 제고,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 보조금, 퇴직자 양로금, 우대 위문 대상자 보조금 표준 상향 조정	-
종합	-2010년까지 4조 위안 투자(1조 1,800억 위안은 중앙재정으로 충당) -2009년 4/4분기 중 중앙투자 1,000억 위안, 2009년도 재해지역 지원금 200억 위안 선집행, 지방 및 사회투자 4,000억 위안 집행		

자료 : '중국 경기부양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양평섭,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중국의 경기 부양조치는 크게 투자관련 조치와 소비관련 조치로 나눌 수 있음.
- 투자관련 조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농촌기초시설건설, 주요 기초시설 건설, 생태환경 건설, 지진지구 복구사업, 자주창신과 구조조정, 증치세 개혁, 신용대출 완화 등을 포함하는데, 대부분이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짐.
- 소비관련 조치에는 의료, 위생, 문화교육 사업, 도시농촌 주민 소득 향상 등이 있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중국 생산 제품의 수요처로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의 비중을 제고하려는 국가의 장기 전략과 연관되어 있음.
-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중앙의 관련부처가 향후 투자계획을 발표함.
- 중앙정부 부처는 철도건설에 3조 5,000억 위안(2011년까지), 교통운송 분야에 1조 위안, 서민주택 건설에 3년간 9,000억 위안, 생태환경 분야에 1조 위안, 전력망 건설에

1조 1,600억 위안, 공항건설에 4,500억 위안, 핵발전소 건설에 1,300억 위안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함.

－ 지방정부의 투자계획

·이외에도 각 지방정부가 총 18~20조 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됨.

－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에서 발표한 부동산 부양책은 다음과 같음.

- 남경 서안 등지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양책이 수요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부동산 개발업체의 재무 건전성이 아직 견딜만한 수준인 만큼 부동산 수요 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가능
- 몇몇 지방정부가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것을 보면, 부동산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을 유추할 수 있음.

<중국의 주요 부동산 부양책>

지역	발표시기	주요내용
전국(재정부)	10.23	· 면적 90㎡ 이하 주택 첫 구입시 계세(契稅) 1.5%에서 1% 인하 · 개인 주택구매시 잠정적으로 인지세, 토지증치세 면제 · 보통주택 첫 구매시 대출이율 탄력조정, 선불금 20%로 하향
장사	7.22	· 경제 적용방 구매시 현금보조금 지급 · 기존 주택 거래시 거래세 1.98%에서 1.1%로 조정 · 주택공적금 선불금 하향(20%), 대출기간 연장(30년)
하문	8.1	· 면적 70~80㎡ 주택 구입시 2인 이하 도시 호구 부여
북주	8.4	· 계세 반감 · 주택공적금 대출기간 연장(30년)
서안	9.4	· 주택구매시 보조금 지급 · 부동산 개발상, 착공시 세금 감면
남경	9.27	· 2009년 9월 30일까지 주택구매자 보조금 지급 · 2009년 9월 30일 이전까지 부동산 개발상 납부 세금 유예
북경	10.7	· 신규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면적 외 공용 면적 부담의무 면제
항주	10.13	· 100만 위안 이상 주택 구매자 항저우 호구 부여 · 주택공적금 대출한도 상향(60만 위안), 선불 기준 하향(20%)
상해	10.14	· 주택공적금 대출한도 상향조정

자료 : '중국 경기 부양 성공할 것인가?', 엘리경제연구원, 박래정, 이철용, 2008

(2) 경제위기 대처방안 평가

- 중국은 2006년부터 시행해온 1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시켜 왔으나, 세계적인 경기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11차 5개년 계획은 ① 수출 및 외국인 투자가 주도했던 기존의 성장패턴에 내수의 비중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 체제로 전환, ②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자원낭비를 제거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 가능한 성장패턴 구축, ③ 노동합동법 제정, 삼농 정책, 사회보장체제 등을 강화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보호와 소득재분배 등을 지향함.
- 경기활성화대책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회복지제도 확충 대책은 11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는 것임.
-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에 따른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구조개선 작업을 더디게 만들었음.
- 11차 5개년 계획에는 2010년까지 대외수지 균형을 목표로 위안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대목이 들어 있으나, 최근 위안화 절상 속도가 감소되고 있음.
- 건설부문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부양책은 향후 거품 논쟁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이 같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이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불거지게 될 저성장 리스크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2009년 경제성장률 8%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 특히 중국 내에서는 내년도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 추동효과가 '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성장둔화를 내수(특히 정부투자) 확대로 보완한다는 계획임.
-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은 수출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0'인 경우 연간 2조 위안이 필요하며, 수출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3.2'인 경우 연간 3조 위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함.

-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조치 이외에도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 최근 칭다오시를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가 내수 부양을 위한 10대 조치와 함께 10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진흥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우리나라나 기타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에 비교할 때,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비중이 86% 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미국, EU 등은 건설보다는 교육, 녹색경제기반 형성, 사회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하고 있음.
- 한국의 경기부양책도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녹색건설이라는 타이틀로 환경과 연계된 부양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성이 있음.

5. 주요국의 경기활성화대책 비교

- 비교 대상이 된 국가들은 GDP의 2.2%(프랑스) ~ 13.3%(중국) 규모의 경기활성화대책을 마련하였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음.
-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국민경제 전부분의 수요를 촉진하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영국과 스페인은 경기침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Stability & Growth Pact의 제약으로 인해 적용할 수 있는 경기활성화대책의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적정 수준을 초과한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로 인해 일본은 경기활성화대책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경제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수요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중국은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제도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 자산가격 폭락으로 인한 가계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초래하는 소비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 부진을 반영하는 내수부족을 재정지출을 통해 만회하려는 것이 각국이 실행하고 있는 경기활성화대책의 목적임.

·가계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과 기업의 투자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혜대상을 특정 산업으로 한정하는 정책,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미래 경제성장을 주도할 산업의 기반형성을 위한 투자로 구분할 수 있음.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환경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 미래 지향적인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대한 정부지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자산가치 및 고용 축소로 불안정해진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재정 지출 방안이 경기활성화대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다만, 프랑스는 재정지출을 가계 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정치적으로 결정하였음.

<주요 국가 경기활성화대책 비교>

구분	일반조치		특수조치	사회간접자본 투자	
	가계	기업		전통적인 투자	미래지향 투자
미국 (GDP 5.5%)	-실업보험 수혜 대상확대, 급여인상 -사회보장 지급액 인상 -교육, 직업훈련 확충 -의료보건 공공 서비스 확충 -소득세 환급, 과세점 상향조정	-신규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촉진 인정 -소규모 기업의 당기 손실을 과거 이익에 적용하여 세금환급	-자동차와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특혜	-경기활성화대책 예산의 19% 수준 -철도, 고속철도, 교량, 도로, 대중교통수단 개선 -공공주택, 연방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사용 제고 -기초분야 R&D 지원
독일 (GDP 4.7%)	-자녀양육 장려금 -사회보장지급액인상	-기업의 감가상각분에 대한 세금감면	-중고차 처분, 신차구입 장려금	-경기활성화대책 예산의 25%수준 -도로 및 철도 신설, 보수 -학교 및 대학 건물 신축, 보수	-기업의 이산화탄소절감,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술혁신 자금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제고 투자 지원금 지급
영국 (GDP 5.0%)	-부가가치세를 인하	-법인세 인상 연기 -소기업의 세금납부 기일연장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정부 보증	-모기지론시장 약화로부터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는 조치	-경기활성화대책 예산의 16% -고속도로 개설 -학교건물 개축 -공영주택 개축	-초고속 브로드밴드투자
프랑스 (GDP 2.2%)	-	-기업에 대한 정부의 환급금 조기지급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융자 -자동차산업지원 대책 -건축, 재건축에 대해 보조금 지급 -정부조달사업에 선급금 증액	-경기활성화대책 예산의 33% -2010이후 예정된 사업 조기 착공 -철도, 에너지, 우편제도 근대화	-
스페인 (GDP 4.9%)	-소득세 감면 -재산세 폐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자동차산업 지원 대책 -주택건설 지원 제도 연장	-경기활성화대책 예산의 1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 -공공주택, 장애인 시설, 병영시설 개보수	-녹색프로젝트 -정부 R&D 투자
일본 (GDP 4.5%)	-모기론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고용, 주거비용지원	-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경기활성화대책 예산의 4.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원 자원 마련	-환경, 물류, 의료 등 분야의 신경제대책
중국 (GDP 13.3%)	-의료 위생 분야 공공서비스체계 강화 -식량최저구매가격 보조금 인상 -사회보장지급액인상	-부가가치세 개혁을 통한 기업조세부담완화 -신용대출 규제완화	-	-경기활성화대책 예산의 86.3%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농촌의 생활 및 생산 인프라 건설 -철도, 도로 등 주요 기초시설건설 -사천성 대지진 재해 복구 사업	-고기술산업 및 산업기술 진보 지원 -생태환경 건설(수질오염 방지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포함)

-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경우, 건설공사 비중이 높은 전통투자와 국가 R&D 기반 강화, 환경산업 육성 등 미래 국가경제의 주축이 될 산업분야의 기반을 조성하는 투자로 구분할 수 있음.
- 경기활성화대책에서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 20%를 기준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미국(19%), 영국(16%), 스페인(16%)과 기준을 초과하는 독일(25%), 프랑스(33%)로 그룹지어 구별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위주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20%에 미달하는 미국, 영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발달한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은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통적인 투자보다는 양질의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미래 지향적 투자에 보다 많은 비중의 재정을 배정하는 경향을 보임.
- 스페인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높으나, 부동산 거품 붕괴로부터 주택건설업을 부양하기 위해 가계의 모기지론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공공주택 건설 확대 방안을 이미 실시한 바 있어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Ⅲ. 한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및 평가

1. 한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1) 경기활성화대책

- 우리나라는 경기활성화대책으로서 2008년 11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2009년 3월에는 추경 편성안을 발표하여 11월 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였음.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①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 ② 실물경제 활성화 ③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지향하는 대책을 담고 있음.
- 실질적인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있는 부문은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인데, 동 대책은 3조원의 세제지원과 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를 구성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재정지출 내용	기타 내용
- 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 ·SOC 투자 확대 등 지방경제 활성화(4.6조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자금난 해소 및 보증 지원 확대(3.4조) ·실업대책 지원(0.3조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1조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1.1조원) ·공기업 SOC 투자 확대(1조원) - 3조원의 감세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09년 12월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에도 적용	-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 추진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 보증 ·한국은행의 시장개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 - 실물경제 활성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토지이용·환경·노동시장·서비스시장 진입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화 ·가계대출 금리 및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도

- 2009년 추경의 규모는 28.9조원이나 이중 11.2조원은 정부가 이미 시행한 감세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집행되는 재정지출의 규모는 17.7조원임.

·재정지출은 ① 저소득층 생활안정(4.2조원) ②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3.5조원) ③ 중소·수출·자영업자 지원(4.5조원) ④ 지역경제 활성화(3조원) ⑤ 미래대비 투자(2.5조원) 등으로 구성

(2) 정부 및 공공기관 SOC 투자계획

- 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의 침체 속도가 가속화되자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등 SOC투자규모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감세 등의 대책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 다음에서는 건설산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등 SOC투자규모 확대와 관련된 대책방안을 살펴봄.

- 2009년 정부의 SOC 예산은 24.7조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6%나 증가(약 5조원 증액)했음.
·당초 정부의 SOC 예산(안)은 21.1조원(전년 대비 7.9% 증가)으로 편성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자 작년 11월 3일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추가로 예산을 14조원 증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SOC 투자에 4.6

조원을 증액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수정 예산(안)은 국회 등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SOC분야에 24.7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됨.

- 정부 예산 외에 주요 25개 공공기관의 2009년 투자규모도 내수경기 부양 차원에서 전년 대비 9조원이나 늘어날 계획인데, 이 중 국토해양부 산하 SOC분야 공공기관의 투자규모가 전년 대비 17.5%이나 증가(6조원 증액)될 계획임³⁾.

(3) 대규모 SOC 사업계획

-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초에 걸쳐 정부가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대규모 SOC 투자사업들은 ‘30대 선도 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경인운하사업’ 등인데, ‘30대 선도 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만 해도 향후 5년 동안 10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 ‘30대 선도 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경인운하사업 및 일부 10대 뉴딜사업까지 포함하면 향후 5년 동안 투자규모는 100조원을 상회함.
-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5+2 광역 경제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제시된 30개의 프로젝트로 2013년까지 향후 5년 동안 국가 재정 및 민간자본 투자를 합쳐 총 50조원이 투자될 계획임.
-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국가재정 및 공기업 투자 25조원 외에 25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며,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임.
- 30개 선도 프로젝트 중 24개 프로젝트가 SOC 투자와 관련되어 있음.

3)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25개 공공기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투자계획’에서 전체적으로 57조 1,214억원을 2009년 중 투자하기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9조원이나 증가한 규모임. 이 중 SOC 분야 공공기관이 전체 투자액 57.1조원 중 70.7%인 40.4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전년의 34.4억원 투자규모보다 6조원이나 증액된 규모이어서 올해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수도권	1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2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3	인천지하철 2호선
충청권	4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 정주기반 등)
	5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 수단
	6	물류 고속도로(제2경부, 제2서해안)
	7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8	동서4축 고속도로(음성-충주, 충주-제천)
호남권	9	새만금개발(새만금개발, 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10	여수 EXPO(박람회장, 주변 기반시설)
	11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암태, 화양-적금)
	12	호남고속철도
	13	광주외곽순환도로
동남권	14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 진주-광양)
	15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16	동북아 제2허브공항
	17	마산-거제 연륙교
	18	부산외곽순환도로
대경권	19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
	20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21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22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
	23	대구외곽순환도로
강원권	24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25	남북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26	원주-강릉 철도
	27	제21영동 고속도로(경기 광주-원주)
제주권	28	서귀포 크루즈항
	29	제주해양과학관
	30	영어교육도시

자료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Green New Deal)사업은 녹색 SOC 사업,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임.
 - 정부는 녹색 뉴딜 사업 36개를 위해 이미 반영돼 있는 재정(4조 3,626억원) 외에 추가로 45조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여 총 50조원이 투자될 예정임.
 - 총 투자금액 50조원은 2009~2012년 동안 투입되는데, 85.5%인 42.8조원을 국가 및 지자체 재정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14.5%인 7.2조원은 민간자본으로 진행할 계획임.
 - 시기적으로는 2009년에는 타당성 검토 및 설계가 주로 이뤄지고, 이후인 2010~2011년에 전체 투자규모의 66.7%에 해당하는 24.5조원이 집중 투자될 계획임.
-
- 녹색뉴딜사업 중 4대강 살리기 핵심사업에는 총 14.5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9년에는 4,881억원을 투입하는데 그치고, 2010~2011년에 13.9조원을 투입할 예정임.
 - 세부적으로는 전체 예산의 54.7%에 달하는 7.6조원을 낙동강 수계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한강에 16.5%, 금강에 17.3%, 영산강에 11.6%를 투입할 예정임.

<녹색 뉴딜 사업 전체 예산>

(단위 : 억원)

핵심사업 예산				연계사업 예산	
사업명	기 반영 (2009년)	추가 소요 (~ 2012년)	계	사업명	예산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038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2,103
				수변구역 녹색화	8,000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환승시설 구축	5,178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1,744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4,980
국가공간정보통합 체계 구축	250	3,467	3,717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3,000
				전자문서 활용 촉진	34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800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845	7,577	9,422	해외 물산업 진출	2,599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1,989
				하수처리수 재이용	1,124
그린차 및 청정에너지 보급	3,209	17,318	20,527	그린차 독자기술력 확보	3,767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 확산	1,936
				바이오에탄올 등 시범 보급	30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272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11,220
				사용종료 매립지 재개발	2,808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5,300
				산립바이오매스활용	7,327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881
그린홈·그린스쿨 사업	-	80,500	80,500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850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13,356
				그린홈 닥터 양성	10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건물옥상, 벽면 녹화사업	160
				에코로드 조성	1,130
				소규모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310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소요 : 국고+지자체+민자

-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녹색뉴딜사업 외에도 공기업 발주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제2경부고속도로 등이 있는데, 이미 올 초 발주가 시작되어 올해 건설수주 및 투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총 사업비 2.25조원에 달하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수자원공사는 2월에 굴포천 방수로~김포터미널 연결공사(3.8km)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량, 갑문 등 경인운하 주요 공정들을 6개 공구로 나눠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등으로 발주하고 착공에 들어가 2011년까지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임.
- 제2경부고속도로는 당초 민간자본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최근에 도로공사 자체 투자 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 중임.

<경인운하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총사업비	2조, 2,500억원
주요시설	인천터미널-5,000억원, 김포터미널-4,550억원, 배후단지(인천, 김포)-6,300억원, 횡단교량(7개소)-3,500억원, 기타-1,950억원, 연결수로(3.8km)-1,200억원(단, 추후 설계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
사업구간	인천 서구 경서동~서울 강서구 개화동
공사기간	2009 ~ 2011년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의 대처방안과 재정건전성 전망

-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과 2009년 1차 추경안의 규모는 43.3조원임.
- 공공지출 확대 규모가 29.1조원, 세금감면 규모가 3조원, 세입보완 규모가 11.2조임.
- 세입보완 규모를 제외한 전체 경기활성화대책의 규모 32.1조원(GDP의 3.6% 수준)에서 가계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임.
- 기업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대책의 비중은 45%인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일차적인 수혜자는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수혜대상이 기업인 경기활성화대책의 비중은 81%임.
-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세입보완 규모를 제외한 전체 경기활성화대책의 규모 32.1조원의 33%임.
- 미래지향적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 수준임.

<우리나라 경기부양대책 분류>

구분	일반조치		특수조치	사회간접자본 투자	
	가계	기업		전통적인 투자	미래지향 투자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14.4조원)	·실업대책 지원(0.3조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1조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자금난 해소 및 보증지원 확대(3.4조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및 대상확대(3조원) ·토지이용·환경·노동시장·서비스시장진입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확대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SOC 투자 확대 등 지방경제 활성화(4.6조원) ·지방재정 지원 확대(1.1조원) ·공기업 SOC 투자 확대(1조원)	
2009년 1차 추가경정안 (17.7조원)	·저소득층 생활안정(4.2조원) ·교육선진화(0.6조원)	·일자리나누기,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 고용시 신규채용장려금 인상, 근로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3.5조원) ·중소·수출·자영업자 지원(4.5조원)		·SOC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3.0조원) ·종합적 하천정비, 생활·농업용수 안정적 확보(1조원)	·R&D, IT/SW 투자확대(0.9조원)

- 2009년 추경의 결과로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5.4%로 증가하고 국가채무의 규모도 GDP 대비 38.5%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2008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7%였고, 추경 편성 전 2009년 재정적자 규모 예상이 GDP의 2.4%였던 점을 감안할 때, 추경으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폭이 큼.
-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GDP의 38.5%로 증가하나, 이는 미국(62.8%), 영국(47.5%), 일본(170.3%), OECD 평균(75.4)에 비해 낮은 수준임.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과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비교 평가

-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기활성화대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경제위기가 부채의 증가를 통한 가계의 자산축적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계부채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발생하였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가계의 소득 증가와 이를 통한 경제 활동 정상화를 지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예산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사업을 통해 일자리도 공급하고 있음.
- 일자리 공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미래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경제기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추세임.
- 미국, 독일, 일본 등 연방제 국가들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게 이양하고 연방정부나 중앙정부는 녹색경제 기반조성 등 미래지향적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 각국의 경기활성화대책은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 하에서 각국이 처한 여건을 감안하여 구체화되고 있음.
- 미국과 EU 회원국의 경우는 공공의료, 서민층 보호 등 가계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는 복지지출의 증가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지출을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향후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녹색경제 기반형성에 대한 연관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함.
- EU 회원국 중 국가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경기활성화대책에 포함했음.
- 일본은 과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대규모의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

가 실패한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기반 형성, 사회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포함하는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왔으나 국회에서 확실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복지제도 확충을 부가한 경기활성화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과 해외 주요국의 경제위기 대처방안 요약 >

국 가	대처방안 요약	대처방안 평가(특징)
미 국	·경기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예산규모는 GDP의 5.5% 수준 ·도로, 교량, 대중교통시설, 고속철도 등에 배정된 예산은 1,500억 달러 ·사회적 약자 보호, 보건의료, 교육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보다 많은 예산 배정 ·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도 전체 예산규모의 5.5% 배정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공급과 함께 복지지출 증가를 통한 서민 소득 보전도 추진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고려 포함
EU	·GDP의 2.2 ~ 5.0% 규모의 경기활성화대책 수립 ·경기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비중은 14 ~ 33% ·가구소득 보전을 위한 복지지출 확충 ·자동차산업 지원용 지출	·미국에 비해 적은 경기부양대책 규모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가계의 신차 구입 자금 일부 지원
일 본	·경기활성화대책규모 GDP의 4.5%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는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방식을 통해 시행 ·미래지향적 사회간접자본투자 강조	·경기활성화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일본 정부가 3차례 발의한 경기활성화대책이 일부만 시행되고 있음.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음.
중 국	·2년간 GDP의 13% 수준인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내수부양책 발표 ·대부분의 투자액이 인프라, 재난복구 등 건설분야에 집중됨 ·공공의료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예산배정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8%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수출에 의한 경제성장 추동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여 성장둔화를 내수 확대로 보완한다는 취지
한 국	·경기활성화대책 규모 GDP의 3.6% ·향후 5년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50조원, 녹색뉴딜사업에 50조원 투자(민자 32.2조원 유치 계획) ·이외 경인운하 및 일부 중복되지 않은 10대 뉴딜사업 포함할 경우 향후 5년간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 100조원 상회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중심이 된 위기 대처방안: 저소득층 직접 지원, 감세, 규제 완화 조치도 있으나, 신속한 효과가 가능한 건설분야 투자 대폭 확대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하되, 4대 강 정비를 비롯해 녹색건설투자 확대 녹색건설사업 투자비 50조원 중 약 40조원이 건설 관련 분야의 투자 규모

– 한국의 경기활성화대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① 한국의 경기활성화대책의 규모는 GDP의 3.6% 수준인데 이는 주요국가 중에서 프랑스(GDP의 2.2%수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임.

·미국이나 영국처럼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터졌거나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경제정책도 재정지출 증가보다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중점대상으로 하는 규제완화 작업을 통한 민간경제활동 정상화를 지향하고 있음.

② 미국과 EU에서 채택된 경기활성화대책에 비해, 한국의 경기활성화대책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높음.

·한국 정부가 마련한 경기활성화대책에서 전통적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달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10대 뉴딜사업 등을 통해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에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약 11% 상당하는 규모가 투자될 예정임.

·건설산업이 고용창출을 비롯한 내수경기 부양효과가 신속하다고 판단하여, 광역 경제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30대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조기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음.

·또한, 참여정부 시절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률이 연평균 2%대에 그치는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에 투자가 저조했던 것도 감안하여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임.

2. 시사점

- 우리나라 정부는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중심으로 경기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유용하도록 신속한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실제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는 미래전략산업의 기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거나 혹은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1990년대 일본은 장기불황으로부터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자 대비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준공 이후 충분한 수요 창출이 되지 못한 문제점이 나타났음.
- 내수경기 부양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신규로 추진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타당성 분석 절차가 이뤄져야 하므로, 기존에 타당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진 사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부문의 재정 건전성, 경기회복시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5년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등에 70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 올해 정부에서는 30대 선도프로젝트, 경인운하사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26%나 증가(약 5조원 증액)된 정부 예산을 편성했으며,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SOC분야 공공기관도 전년 대비 17.5%나 증가(약 6조원 증액)된 투자 계획을 수립했음.
- 향후 5년간 70조원 내외의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올해 수준 정도의 예산을 꾸준히 편성해야 하나, 국내 경제 위기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별히 증액된 예산을 향후 2, 3년 후 경기 상승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재정 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을 것임.

- 정부가 향후 5년간 30대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사업 등에 투입을 계획한 민자는 32.2조원이고, 일부 10대 뉴딜사업까지 포함하면 향후 투입이 필요한 민간 자본은 40조원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향후 재정투자가 계획대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요한 민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임. 그러나, 현행 민자사업 및 선투자 관련 제도로서는 이 정도 규모의 민자를 적기에 유치하기에 분명 한계가 있음.

빈재익(연구위원:jipins@cerik.re.kr)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박성민(연구위원:smpark@cerik.re.kr)